

# 한덕수 “계엄 직전 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있었다”

현재,尹 10차 변론기일 한 총리·홍장원·조지호 증인 신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체포 명단 받아 쓴 장소는 사무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메모지에 체포명단을 받아 썼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격조하고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한 총리의 입을 빌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방탄 입법·출탄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계엄절차의 위법성을 부각했다. 국회 측은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모두 격조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질문에는 “계엄이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대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급박한 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를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해온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받아 쓴 장소를 ‘국정원장 관저 앞 공터’에서 사무실로 변경했지만,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홍 전 차장은 “검찰 진술 때부터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밤 10시 58분이고, 받아 적은 건 밤 11시 6분 사무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민의힘이 이날 홍 전 차장의 동선 이 담긴 방범카메라(CCTV)까지 공개하자, ‘사무실’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로 압박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12월 3일은 겨울인데, 밖에서 메모하는 건 춥고 이례적인데 장소를 혼동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명단을 받아 적은게 밤 11시 6분이고, 밤 11시 30분에 회의 참석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正書·바르게 씌) 하라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통화장소나 메모형식은 증언의 신빙성과 무관하다”면서 홍 전 차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조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를 제시하면서 체포명단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1·2차 메모를 다시 기억하는 데 12명은 확실했다”면서 “정보활동 특성상 메모를 하는 건 습관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취재단>

## 尹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구속취소 심문은 57분간 진행

###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국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13분만에 끝났지만, 구속취소 심문은 57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또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은 구속 적법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이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해 27일까지로 판단해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은 지난해 25일 밤 12시까지라며 ‘구속기간 도과 후 불법기소’라는 게 골자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제기는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져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기한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하며 기소 당시 구속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재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애초 수사 자체가 위법했고,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지만 아직 대통령이고, 내란 중요 임무 수행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NBS,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1%·김문수 10%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 케이사트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조사(NBS) 결과로,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일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p) 하락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70명)에서는 김 장관이 23%, 오 시장이 16%, 홍 시장과 한 전 대표가 각각 12%였다.

민주당 지지층(337명)에서는 이 대표가 75%,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각각 2%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호감도를 묻는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이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 시장 25%, 김 장관 24%, 한 전 대표 20%, 홍 시장 18%였다.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4%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